

근로시간 52시간 · 휴일수당 150% 합의

<주당 최대>

환노위, 5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300인 이상 사업장 7월 시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고용노동위원회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밥솥 논의 끝에 해답을 얻은 것이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 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단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관광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도 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27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총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총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하 바른미래당 간사.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노위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 해소를 기대했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환노위는 연속 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도 합의했다.

총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2013년부터 주 52시간 체제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상 5년 만에 합의를 했다"며 "여야가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

평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3당 원내대표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부분을 다 고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수당 활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노동계 요구와 달리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는 대신 관광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고려한 주휴일 근무금지도 야당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뉴시스

조배숙,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국가가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주어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의 연이은 세탁기, 태양광제품 셰이프가드 조치 발동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적장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비용부담 우려로 외국산 제품에 의한 무역, 산업 피해에 대응하여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부가 조배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중소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사과정에서의 피해 입증과 이를 위한 대리인 선임 비용과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의 평균비용만 2억원에 달해 그 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제도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지원건수가 2014년 3건, 2015년 0건, 2016년 3건, 2017년 1건(2017년 9월 기준)에 그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조배숙 대표가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여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 보호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막대한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크다.

조배숙 대표는 "세계는 자국기업과 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들은 무역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선임할 대리인 비용의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들을 선별하기도 어려워 무역구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검증된 대리인에 의해 비용부담 없이 무역구제 조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역구제 제도 활용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5법 발의키로

신기술·서비스 실증사업 위해 일정 기간 규제 면제... 정보통신 융합 분야 등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지역특구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 혁신 5법은 당 주도로 당정정이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며 "내일(28일)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민주당

은 정보통신 융합 분야·산업 융합 분야·금융분야와 지역혁신산업(지역특구)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규제혁신 5법은 규제행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특례의 유형, 유효기간, 법령정비 등 사후조치, 규제특례 제한, 규제특례로 인한 손해배상, 특례 조건, 특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제 특례의 유형은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이다.

관련 법 존재나 법상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규제 여부를 30일내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법 공백·불합리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한 뒤 관계기관이 관련법을 정비하게 된다.

이윤리 법 공백·불합리·불허 등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를 검토하도록 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특례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소관 행정기관장(과기정통부·산업부·금융위)과 민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특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신청해 소관 행정기관(중기부)과 혁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부여 여부를 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산업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 확인 의무, 규제정비 의무, 신산업 규제특례 부여 방향 및 고려사항 등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각각 핀테크와 산업융합, ICT(정보통신기술)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등이 골자다. /뉴시스

민주당 "차 30년 구형, 매우 당연...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려던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